

☛ 진흥회 동정

'99. 2차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선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7월 '99. 2차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 해당 제조업체의 공인인증시험 면제신청 제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신규 면제제품을 선정하였다. 향후 이들 업체들은 공인시험기관인 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대신 자체시험을 하여 자체시험성적서로서 공인기관 시험을 갈음할 수 있어 시험대기에 따른 생산라인 정체해소 및 기한내 납품등으로 생산성 향상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면제제품 선정 현황

품 목 명	제 품 명	건 수	업 체 명	비 고
개 폐 기	○ 부하개폐스위치	1	신 성 산 전 (주)	
	○ 자동구간개폐기	1	(주)서울전기제작소	
	○ SF6 가스개폐기	8	L G 산 전 (주) 일진전기공업(주)	
차 단 기	○ 가스절연개폐장치	4	일진전기공업(주) (주) 효 성	
휴 즈	○ 컷아웃스위치	1	일진전기공업(주)	
피 뒀 기	○ Gapless형 피뢰기	1	신아전기공업(주)	
보 호 계 전 기	○ 방향성접지계전기	1	대 연 전 자 (주)	
	○ 과전압접지계전기	1	L G 산 전 (주)	
	○ 복합형계전기	1	"	
총 계	9	19	-	-

'99. 1차 산업기반기금(신기술보급 전기부분)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9. 7. 21(수) 진 흥회 회의실에서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

하여 산업기반기금(신기술보급 전기부문)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99. 1차 동
기금 융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향후 이들 융자대상사업자들은 산업자원부의 사

업자확정을 거쳐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를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1차 지
원후 잔액분(1,315백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하여 2차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99. 1차 산업기반기금 융자대상사업자

(신기술보급사업 전기부문)

(단위 : 백만원)

관리번호	회 사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소요금액	지원금액	취급은행 (지점)
991N-01	제 암 하 니 스	자동차 내연기관용 저항전선 사업화	'99. 6- '99. 12	739	585	광주은행 (목포)
991N-02	조일조명공업(주)	HQI 100W, 150W 양산화	'99. 7- 2000.7	620	600	주택은행 (성수역)
계	2개 업체	2개 사업	-	1,359	1,185	-

* 융자금리 : 연 7.5%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포함)

'99. 2차 산업기반기금(고부가가치화 조명부문)

융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9. 7. 23(금) 진
흥회 회의실에서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
하여 산업기반기금(고부가가치화 조명부문) 융자
신청업체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99. 2차
동 기금 융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향후 이들

사업자들은 산업자원부의 사업자확정을 거쳐 시중
은행을 통한 융자를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1·2차 지원후 잔액분(26
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공고를 통하여 3차 사
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99. 2차 산업기반기금 용자대상사업자

(고부가가치화 조명부문)

(단위 : 백만원)

접수번호	업 체 명	사 업 명	대표자	사업기간	소요금액	지원금액	취급은행 (지점)
992L-01	미미전자(주)	형광등용 터널조명기구	원 종 만	'99.8 - 2000.7	308	250	신한은행 (연신내)
992L-02	(주)다우디케이	고성능 자동차 헤드라이트램프	권 태 호	'99. 7- 2000. 6	714	450	한미은행 (청담동)
계	2개 업체	2개 사업	-	-	1,022	700	-

* 용자금리 : 연 7.5%, 용자기간 : 5년(2년거치 포함)

제조물책임(PL)법 관련 의견 건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9. 7. 29(목)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중전기기 제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대중공업(주) 등 회원사 담당자들과 동법 시행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종합,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

- 피해자 범위의 구체화
- 무과실책임의 손해범위 지정
- 면책사유의 준수기준 및 범위 현실화
- 소멸시효 기간 세분화 및 적용시한 일률적 적용 배제
- 법 시행시기 연기 등이다.